후백제 정체성 확립·재조명 '한뜻'

전주·논산·문경·상주시·완주·장수·진안군,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위한 업무협약

전주시를 포함한 후백제문화권 7개 시·군이 후삼국시대의 주역이었던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규명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영석 상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김영길 문경부시장, 한성환 논산시 동고동락국장은 1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완주·장수·진안과 경북 문경·상주, 충남 논산은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왕의 탄생과 성장, 후백제 건국, 견훤왕의 죽음 등 견훤왕의 역사기록은 물론이고 후백제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지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백제 역사문화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며, 그에 걸맞은 위상도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후백제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이날 7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영석 상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김영길 문경부시장, 한성환 논산시 동고동락국장은 1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 시·군은 이날 협약을 통해 후백제문화권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협의회가 출범하면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와 별도로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주요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홍보활동 등에 협력하고, 후백제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 사업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7개 시·군은 당장 오는 10일 시행되는 '역사문화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후백제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나아가 타 지자체의 추가적인 참여를 이끌어 후백제 역사문화를 되살리자는 목소리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포럼과 정책토론회, 학술대회 등도 추진해 후삼국시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을 위해 지난 2019년 문화유산전문가와 박물관장, 학예사, 관련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학술연구단체인 후백제학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의 출범으로 찬란했던 후백제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재조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뿐만 아니라 충남과 경북 지역을 아우르는 후백제의 역사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는 900년부터 936년까지 37년간 후백제의 왕도(王都)로서 후삼국시대 격동의 중심지이자 찬란한 역사문화가 펼쳐졌던 역사적 장소다.

/김윤상 기자

낙수정 군경묘지에 한옥형 정문 설치

전주시, 5일까지 1억원 투입 공사 완료키로

낙수정 군경묘지 정문이 전통 한옥양식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5일까지 낙수정 군경묘지 한옥형 정문 설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총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기존의 낡은 철제 정문을 철거한 뒤 묘지 내 전통 한옥양식의 제각 및 기와 담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격조 높은 솟을삼문 형식의 한옥형 정문으로 개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9개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총괄조경 건축가 자문 및 디자인 심의,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해 지난달 4일 공사에 착수했으며, 현충일 추념 행사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충시설을 찾는 시민들과 유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할 수 있도록 보훈단체 회원들과 함께 월남참전기념비, 충혼비, 3.1운동 기념비 등 15개 현충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전북도와 함께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송천동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 인근에 약 3만㎡ 규모로 전라북도·전주시 보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 첫 삽을 뜬 이후 부지 정리, 전시관 공사, 연못 조성, 황극단 이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낙수정 군경묘지 정문을 교체하고 보훈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와 존경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세심히 살펴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 민원실서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만성동 전주지방법원을 가지 않고도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시청 내 민원실에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3종의 발급이 가능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운영한다고 1일에 밝혔다.

그간 전주시에 설치된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발급이 가능해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만성동 전주지방법원을 방문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

통합무인발급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발급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다만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카드 등이 필요해 사전에 등기소를 통해 법인인감카드 등을 발급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 위촉식·간담회

전주시·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탄소산업 분야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상생협약 도출 주력

전주시가 노동계와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등 노사 상생 전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1일 라한호텔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이용필 일자리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센터장, 김창환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는 ▲한국노총, 전주시 비정규직센터 등 노동계 ▲효성, 비나텍, 피치케이블, 오성, 라지 등 기업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캡틱종합기술원, 노사발전재단 등 유관기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청년희망단 등 시민대표를 포함한 33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탄소산업 분야 전주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면서 오는 10월 탄소 분야 기업들과 체결할 상생협약(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생형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주영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팀장과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등이 전주형 일자리 추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주영 팀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노사민정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과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기반으로 지역의 투자 촉진과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상생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밀착해 지원하고, 지역별 추진현황에 대한 네트워킹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준호 교수는 "전주의 저조한 제조업에 활력을 높이고, 시민·노동자·청년이 행복한 기업과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전주형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여건의 한계를 개별 기업이 돌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탄소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협력대응으로 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도 노동시간 축소, 임금 인상, 장기근속자 우대, 작업장 소통 개선, 정밀건강검진비 지원, 안전교육,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등 노동환경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관련 기업과 근로자, 지자체, 시민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합의를 도출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탄소소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탄소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13개 유관기관과 여름철 식중독 신속 대응

전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방 및 대응방안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시는 13개 유관기관(부서)과 식중독 예방·대응 매뉴얼을 정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식중독 발생 신고·보고 ▲식중독 원인조사반 구성 및 조사 수행 ▲원인·역학조사 결과 보고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해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시는 또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관계자와 영양사, 조리사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등 위생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해 특별위생교육을 추진하고, 최근 이용이 급증한 족발 및 보쌈, 치킨 판매업소 등 배달음식점 50곳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4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마스크와 앞치마 착용을 독려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 교육에도 힘쓰기로 했다.

병원성 대장균과 비브리오패혈증 등과 같은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에는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철저 ▲식재료 세척시 수돗물 사용하기 ▲계란 5℃ 이하 보관 ▲육류, 어패류, 채소류 칼·도마 구분 사용 ▲어패류·육류 익혀먹기 ▲대형 용기에서 조리된 국 신속 제공(식은 경우 재가열 후 제공)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